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0
----------	-----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박덕흠 · 구자근 · 엄태영
이헌승 · 고동진 · 정희용
강승규 · 김승수 · 장동혁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며, 현 상태대로 가면 2050년에는 226개 시·군·구 중 89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지난 20년간 천만원대 초반 대에 머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함.

농업소득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음.

어촌 또한 2020년 기준 어업인 평균 소득은 5천 300만원으로 도시 가구 평균 소득인 6천~6천 5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인구가 2000년 대비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임.

다행히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2010년 55.9%에서 2018년 72.2%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농어업·농어촌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계 보전, 여가·휴식처 제공,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20조).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인 기초연금”이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마을 환경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 제5조(지급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 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
 4.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
- ④ 수급권자 가구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적용기간은 지급금액이 결정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③ 농어업인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

- 제7조(지급신청)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신청·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료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통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사후관리

제11조(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산지·어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하여도 수급권자의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가구 구성원의 최고 연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2조 각 호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업인 기초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업인 기초연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농어업인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시효) 제14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농어업인 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